

문대통령 “전남 블루프로젝트 한국경제 블루칩 될 것”

〈에너지·관광·바이오·운송·은퇴도시〉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한전공대 2022년 개교
나주, 차세대 에너지 거점
고흥, 우주센터·드론산업
신안·여수 연도교 건설
문대통령, 전폭적 지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인사 말에는 전남에 대한 애정이 그대로 녹아있었다는 평가다. 그는 “1978년 해남 대항사에서 전남과 인연을 맺었다”며 “그때 주민 등록도 옮기고, 예비군 훈련도 받았으니 법적으로 한 때 전남도민이었다”고 과거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11분간의 인사말에서 문 대통령은 역사 고비마다 역사의 물결기를 바로 잡아온 전남과 도민에 대한 감사부터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기대, 전남도가 추진중인 각종 현안 사업과 산업 구상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정부 지원 법적 근거 및 규모를 두고 우려곡절을 겪은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천명하며,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부지까지 둘러보는 적극성을 보였다.

◇“블루 이코노미, 한국 경제의 블루칩 되길 기대”-문 대통령은 전남도의 민선 7기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전남 발전과 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밝힌 새천년 비전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이 가진 풍부한 청정자원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승화시키기를 것을 그 골자로 한다.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관광), 블루 바이오, 블루 트랜스포터(운송), 스마트 블루 시티(은퇴도시)라는 5가지 블루 프로젝트를 통해 분야별 미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전략이다. 이들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 및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우선 정부에 ▲한전공대 설립 지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 국가계획 반영 ▲전남형 스마트 블루 시티 국가 시범도시 지정 ▲대규모 해상풍력발

전단지 민간투자 활성화 ▲유엔기후변화 협약당사국총회(COP) 여수 유치 ▲전남도 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호남권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들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면서, 이들 프로젝트의 2020년 정부 예산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 추진 현안사업 일일이 언급하며 지원 약속-한전공대 2022년 개교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도가 추진중인 거의 모든 현안사업과 미래산업을 인사말에서 언급했다. 에너지와 관련 그는 “신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전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에너지벨리가 차세대 에너지 거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이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드론산업의 중심지와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 선정을 통한 미래차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전남의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해양관광 자원이 풍부한 매력만점 관광지인 전남의 신안, 여수 연도교를 계획대로 건설해 관광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호남 고속철을 조속히 완공해 경전선과 연결해 무안국제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등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포함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전남관광 6000만 시대를 정부가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전략과

전남의 바이오산업 비전을 연계해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함께 만들고 ‘바이오 메디컬 허브, 전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자질 없이 진행해 부산까지 2시간대로 단축하고 영호남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을 시작으로 무안국제공항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 관광 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전공대 설립기본계획, 9월께 건축설계안과 함께 공개될 듯-문 대통령은 이날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이어 나주의 빛가람혁신도시를 방문했다. 전남대에 올라 한전공대 부지를 직접 둘러봤다. 대통령이 2022년 개교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만큼 한전공대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됐다는 평가다.

정부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지원 규모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기존 법령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전남도·나주시 등 지자체 재정 지원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만 구체적인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은 한전이 오는 9월께 건축설계안과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전공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전문인력의 양성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NSC “한·일, 대북제재 위반 조사받자”

“한국 잘못 없다 결론 나오면 사과 후 즉각 규제 철폐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사실이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특히 일본 고위 인사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의뢰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NSC의 이 같은 발표는 일본이 수출규

제 근거로 들고 있는 ‘한국의 전략물자 부정반출’ 주장과 관련, 제3차 격인 국제기구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일본 주장의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 여부도 가리지는 의미여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고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되면 정부는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평행선 달린 한·일 첫 실무회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논의…일, 규제 이유 기존입장 반복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해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12일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다. 양국 관계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일본 측에

선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郎)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양측에서 각각 2명씩 참석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이날 오후 7시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졌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했다.

또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들리는 등 한국 수출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며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회

의 시작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회의장은 회의 시작 전 1분만 취재진에 공개됐는데, 양측 참석자들은 약속 등 우호의 표현은 일절 하지 않았다. 특히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이날 일본 측은 장소 선정에서부터 한국 측 참가자들에 대한 응대까지 한국을 홀대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경제산업성 10층에 위치한 회의 장소의 뒷면에는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는 글을 프린트한 A4 용지 2장 크기의 종이만 달랑 붙어 있었고, 참가자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회의 참가자들의 이름표조차 없었다. 회의 장소도 평소에는 창고로 쓰이는 장소인 듯 테이블과 간이 의자가 한 귀퉁이에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기자재 파손 흔적이 있을 정도로 정돈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올 광복절 특사 없다

靑 “논의된 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 데 이어 정부는 올해도 특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광복절 특사의 경우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풍암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중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